

전주 원도심 내 개발 일부 제한

시, 역사문화자원 체계적 보존·관리 위해

전주시가 원도심 100만평 아시아 문화심장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옛 4대문안 역사도심 기본계획 수립을 추진하는 가운데 다양한 문화재와 역사문화자원에 대한 체계적인 보존·관리를 위해 원도심 지역 내 개발행위를 일부 제한하기로 했다.

전주시는 천년 전주의 역사와 문화가 옛 4대문안 및 역사도심 주변 지역에 산재한 다양한 문화재와 역사문화자원에 대한 체계적인 보존·관리를 위해 중앙동과 풍남동, 노송동 일부를 제외하고 개발행위허가(건축허가) 제한구역으로 지정해 건축물의 층수를 당분간 제한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옛 4대문안 및 원도심 지역에는 후백제왕도와 조선왕조의 발상지 등 전주가 보유한 다양한 역사문화자원이 집중돼있다.

또 전주부성 성곽길과 일제강점기 주요건물, 미래유산으로의 가치가 충분한 많은 시민들의 역사와 추억이

담긴 장소와 시대별 도시 변화과정의 고스란히 스며있는 건물들도 많다.

이에 시는 원도심이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역사문화자원 및 건축자산을 보존하기 위해 역사도심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나고 주변과 어울리지 않는 7층 이상의 고층 건물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전까지 건축행위를 제한할 계획이다.

역사도심 내 9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6층 이하의 건축물의 경우 주민들의 생활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건축행위가 허용된다.

시는 건축물 제한 층수를 올리기 중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최종 결정할 계획이며, 층수 제한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센티브도 제공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시는 관련 분야 지역학계와 전문연구원들의 연구 활동과 서울시 등 타 지역 사례 조사, 수 차례의 현장조사, 다올마당 운영 등을 통한 시민 의견수렴 등을 거쳐 역사도심기



음주차량, 전신주와 충돌 14일 오전 12시41분께 전주시 중화산동 한 교차로에서 벨로스터 차량이 길가에 세워진 전신주를 들이받아 1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은 사고 충격으로 처참하게 파손된 차량 모습.

본계획 수립을 완료했다. 역사도심 기본계획에는 1970~80년대 다양한 전주의 근대 문화유산과 풍남문, 전동성당, 객사, 전주부성 성곽 및 옛길 등 다양한 문화재 및 역사문화자원을 간직한 전주부성 및 4대문 주변지역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보존·관리·재생·활용방안을 담았다.시는 이러한 역사도심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시민들의 의견과 제안에 귀 기울이고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김영재 기자

전주시, 3D프린팅 전문인력 양성

전주시가 미래 신성장동력산업인 3D프린팅산업과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해 3D프린팅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전주시와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오는 20일부터 24일까지 K-ICT 3D프린팅 전주센터 교육장(전주시 완산구 효동3길 7 익성빌딩 4.5층)에서 2017년도 제1차 3D프린팅 전문인력 양성 교육을 진행한다.

이번 3D프린팅 전문인력 양성교육은 관련 전공 대학생과 재직자, 예비창업자 등 총 20명을 대상으로 5일간 총 20시간에 걸쳐 진행된다.

주요 교육내용은 △3D모델링 기술 △3D프린팅 제품 아이디어 도출 △3D프린팅 제품 설계 △모델링 등이다. 특히 시는 이번 교육을 통해 탄소융·복합 고분자 및 지역 전통문화에 특화된 교육을 제공, 전문강사 등 현장중심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3D프린팅 주변확대에 나설 계획이다. 시는 이번 1차 교육을 시작으로 올해 총 10회 이상의 교육을 진행, 3D

프린팅 관련 전문 인력을 꾸준히 양성해 지역 신산업 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해 5월 개소한 K-ICT 3D프린팅 전주센터'를 통해 입문·기초·응용·심화 등 단계별 교육과 전문인력양성교육, 유관기관연계교육, 자유학기제교육 등 총 10회 교육을 진행해 총 189명의 수료자를 배출했다.

강창수 전주시 탄소산업과장은 "전주시는 미래먹거리인 신성장산업 육성을 위해 K-ICT 3D프린팅 전주센터를 중심으로 3D프린팅 전문인력 양성과 시제품제작지원, 국제산업박람회 등을 진행해왔다"면서 "앞으로도 신산업 육성을 위한 지속적이고 다양한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교육 참여 및 3D프린팅 관련 문은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K-ICT 3D프린팅 전주센터(063-281-4163)로 문의하면 된다.

/김영재 기자

김명지 의장, 혁신도시 지역인재 할당제 법제화 제안

전주시의회 김명지 의장이 전국 기초의회를 대표하는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에서 혁신도시 공공기관 지역인재 할당제 법제화를 제안했다.

김 의장은 14일 부산 중구 코모도호텔에서 열린 제200차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월례회의에서 "현재 정치권에서 논의 중인 혁신도시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은 국가균형발전과 청년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선결과제가 되고 있다"며 이를 법제화하는 데 전국 기초의회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또 그동안 추진돼 온 각

지역의 혁신도시가 담초 취지대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적어도 해당 지역인재 35% 의무채용 법제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의장협의회는 김 의장의 이 제안에 적극적인 지지를 약속했으며 앞으로 지역인재 할당제 법제화를 위해 국회와 중앙정부를 상대로 지속적인 노력을 해나가기로 했다.

김 의장은 "그동안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 법제화를 요구했지만 별 성과가 없었다"며 "전국 기초의회가 힘을 합친다면 반드시 법제화가 성사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재 기자

'경영난' 화훼업계 꽃 소비문화 확산 나섰다

전주시, 소비촉진 캠페인·직거래 판매 행사 실시

전주시가 장기화된 경기침체와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 이후 경영난에 처한 화훼업계를 돕기 위해 꽃 소비문화 확산에 발 벗고 나섰다.

이에 앞서 김승수 전주시장은 지난달 정기인사철을 맞아 "청탁금지법 취지에 밝아나지 않는 선에서 꽃 선물 받기는 가능하지 않느냐"면서 친체된 화훼업계에 활기를 제공하기 위한 꽃 소비촉진과 생활화를 강조했다.

시는 14일 시청로비에서 침체된 화훼농가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꽃 소비촉진 캠페인 및 직거래 판매행사를 실시했다.

이날 행사는 김승수 전주시장이 경영난에 처해 있는 화훼업계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꽃 소비촉진을 주문하듯 따른 것으로, '별런 타인데이'를 맞아 열린 가족과 연인 등에게 초콜릿 대신 아름다운

꽃을 선물하도록 유도해 침체된 화훼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시민생활 속에서 꽃 소비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전주시화훼연합회(회장 윤기정)와 함께 진행한 이날 행사에서, 시는 시청을 방문하는 시민들과 직원 등을 대상으로 꽃 소비 촉진을 위한 홍보를 실시했다. 또, 전주지역 화훼농가에서는 직접 생산한 꽃을 직거래 방식으로 저렴한 가격에 시민들에게 판매했다.

특히 꽃이 핀 화분(초화류)은 5000원~1만원, 초콜릿 꽃바구니는 2만원~3만원, 장미 및 프리지어 생화는 송이(단)당 2000원~3000원 등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에 판매돼 눈길을 끌었다.

이와 함께 시는 꽃 소비 활성화를 위해, 각 부서별 회의용 타자 및 직원 업무용 책상에 꽃을 비

치하는 'TTF(1테이블1플라워)' 참여를 독려하고, 인사이드와 줄업시 등 주요 기념일에 꽃 선물하기 캠페인을 전개해나가고 있다. 또, 유관기관·단체 등과 꽃 소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각종 행사시 꽃을 비치하거나 전달토록 유도할 계획이다.

시는 김영란법 본격 시행 후 침체된 화훼 농가를 돕기 위해 정기인사 시 꽃 선물을 권장하고, TTF 캠페인을 적극 추진하는 등 꽃 소비촉진을 위해 힘써왔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꽃 소비 촉진 및 생활화는 단순히 화훼업계를 지원하지는 것이 아니며, 이를 통한 지역 내 선순환경제구조를 만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자는 큰 의미를 담고 있다"면서 "지역 화훼농가를 살리는 것은 지역을 살리는 것인 만큼 꽃 소비촉진을 시민들과 유관기관·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김영재 기자

경찰서에서 쇠망치 휘두른 60대 여성 징역 8개월 선고

전주지법 형사2단독 강두래 부장판사는 14일 경찰서 출입문을 쇠망치로 부수려고 한 혐의(공용물건손상미수)로 기소된 박모(61·여)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8월 22일 오후 2시25분께 전북 전주 완산경찰서 현관 앞에서 큰소리를 치며 42cm 길이의 쇠망치로 현관문 유리를 수차례 내리쳐 부수려다 경찰관의 제지로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2년 5월 군산의 한 동사무소의 출입문 유리를 망치로 깨뜨린 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과 관련해 "교도소에 가서 공소장을 변경한 뒤 재판을 받고 싶다"는 이유로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는 공용물건 손상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벌금 30만원을 선고받고 2015년 11월 출소했다.

강 판사는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인한 누범 기간에 또다시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사람에게에 위해를 가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민근 기자

완산구 간부 공무원, 현장행정 실시

완산구(백승기 구청장)는 지난 13일 주민이 찾아오기 전에 미리 한발 앞서 현장에 찾아가는 '감동의 현장 행정' 강화를 위해 불법주정차 및 교통 문제 지역을 방문, 현장행정을 실시했다.

간부공무원 현장행정은 주민들의 소리를 듣고 주민편의의 구정을 펼치기 위해 월회 재난위험지역, 건설사업현장, 복지시설 및 청소 사업장, 현장 근무자 쉼터 등을 구청장과 간부공무원이 방문하고 있다.

이날 현장 행정은 한옥마을 인도변과 중앙시장 상가주차장 주차상태를 직접 살펴보고, 불법 주차 근절 대책

및 주차장 진입로 병목현상 해소에 대해 논의했다.

이어 혁신도시 입구 교통심 파손지역을 방문해 도로시설물 점검과 시민 불편사항 및 단속 현장의 개선사항 등을 청취했다.

백승기 구청장은 "생동하는 현장행정을 통해 결포장만 중시하고 근본적인 문제는 회피하는 전이행정을 철저히 탈피, 발로 뛰며 다양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청취하겠다"며 "앞으로 시민이 피부로 체감 하고 감동할 수 있는 주민맞춤형 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김영재 기자

구독문의 288-9700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